

## 黒字時代の 문턱에서

金 常 隆  
 〈産業研究院 尖端産業室長・經博〉

지난 1986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외거래에서 흑자를 기록한 해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내다 판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이 우리가 사들여온 것보다 47억불이나 더 많았다. 당초 5억불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던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正常이라는 관념적 무력감에 젖어 있던 우리들에게 기분 좋은 충격을 가져다 준 것이다. 더우기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원 샷(One-Shot)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하나의 추세일 수도 있다는 데서 그 충격의 강도가 한층 더 깊게 느껴진다. 1982년에 26억불 적자, 83년에 16억불 적자, 84년에 14억불 적자, 85년에 9억불 적자, 86년에 47억불 흑자 그리고 금년 1월 중에 흑자가 벌써 6억여불이 된 것을 근거로 87년에 70~80억불 흑자 — 흑자의 추세선이 대충 그려진다.

국제수지흑자는 대외거래에서 번 것이 쓴 것보다 많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한 요약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흑자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적자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국제수지흑자하에서는 먼저 저축이 투자를 능가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자력조달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적자때의 투자재원부족을 메꾸기 위

한 여러가지 정책의 필요성과 제약조건들이 없어지게 된다. 적자시에는 투자할 돈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돈을 꾸어오고 돈이 귀하다 보니 정부나 은행에서 자의적 또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할 돈을 나누어 빌려 주었으나 흑자시에는 외국으로부터 빚진 원금을 조기에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며 또 투자재원에 여유가 생기게 되므로 선별적 정책금융을 위해 정부가 깊이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고 동시에 자원의 효율성에 더 치중한 투자재원의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적자하에서는 외화획득과 부족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양적인 수출확대가 지상과제가 되어 금융·산업·조세정책을 총동원하여 수출산업으로 자원을 집중하였으나 흑자가 계속되는 경우 이제는 이런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방법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며 국내시장, 국내산업, 산업간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문제 등에 관심을 돌릴 수도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자칫 비효율과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는 여러가지 정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시장경제원칙으로의 복귀가 가속될 수 있으며 정부는 적자하에서의 양적 성장추구를 위해 불가피하였던 제약조건에서 벗어나 그간 소홀히 하였던 소득분배와 복지후생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다.

또 적자가 해소됨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의 개방폭과 속도를 다소 늘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경제성장면에서도 흑자기조하에서는 투자재원의 자력조달로 고투자→고성장→고소득→저축증가→흑자증대의 소위 '좋은 순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채증가를 야기하는 대신 외채감소를 수반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또 흑자가 계속되는 경우 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급격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도야 어떻든 개도국, 신흥공업국, 후진국 대신 중진국 또는 선진국, 공업국으로 보아주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개방압력, 보호주의압력, 공정거래압력, 후진국특혜조치 철폐 등 불리한 대외환경이 더 크게 「크로즈 업」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흑자는 이제 정말로 이땅에 정착된 것일까?

1986년 흑자의 상당부분이 소위 「3低」에 의하여 생겼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세계 석유값의 50% 하락, 세계금리의 하락, 일본 「엔」貨의 44% 평가절상으로 우리나라는 석유수입금액에서 엄청난 절약을 하였고 금리하락으로 이자지급 금액에서 절약하였고 또 「엔」貨 절상으로 일본수출가격이 오른 틈을 타 일본수출시장의 「쉐어」(share)를 잠식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수출신장을 하였다. 즉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여건의 변화는 유독 우리나라에만 유리한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만큼 대외거래나 경제성장면에서 큰 개선을 보인 나라가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흑자의 원인이 대외여건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대외여건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자동차, VTR, PC 컴퓨터, 반도체 수출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의 개척,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 등 수출산업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이 아직도 존재하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흑자기조를 완전히 정착시킬 만치 튼튼한 기반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엔」

화의 강세는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석유값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미국 및 EC의 보호주의의 강화, 시장개방압력 가중, 원화절상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에 심각한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원자재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가공무역형 수출구조 등 무역수지를 언제라도 적자로 다시 反轉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비를 머금은 먹구름처럼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 47억불의 흑자에 기분좋은 충격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해 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흑자가 정착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네, 이제는 흑자에서 나오는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입네, 이제는 곧 다 잘살게 되었네 하고 흥청망청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실령 지금의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한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 흑자는 단지 대외거래에서의 흑자일 뿐 우리 경제내부에서도 흑자가 다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역흑자의 주역이자 또 수혜자인 수출기업, 대기업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 많이 있다. 농촌, 근로자, 중소기업, 내수산업 영세민 — 이들의 적자는 대외거래에서 흑자가 생긴다고 하루 아침에 흑자로 변하지는 않는다. 이들 부문에 흑자가 생기지 않는 한 흑자시대를 산다고 아무리 노래해 봐도 그것은 앵무새의 노래처럼 아무 실속도, 의미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흑자에 관한 한 두가지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금의 대외흑자가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완전한 것으로, 즉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둘째는 이렇게 대외 흑자가 지속적인 것이 되어 정착화되었을 때 우리 경제내부의 적자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흑자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먼저 어떻게 하면 대외 흑자기조를 장기화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장벽을 넘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까지의 저가격·대량수출방식에서 벗어나 고가격·소량·다품목의 수출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첨단산업을 수출 주종품목으로 삼아 국제분업화 추세에 대비하며 동시에 생산성향상,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투자를 늘림으로써 기술혁신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부단한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 및 기술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서로간에 수직적분업을 통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전문화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꾀하여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1986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55억불 적자를 내고 미국과는 74억불 흑자를 내었는데 이같은 기형적 무역구조의 개선 없이는 흑자기조를 지속시킬 수 없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격인데 문제는 미국에서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일본에서 더 많이 수입해야 되고 따라서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1986년에 우리나라의 VTR, PC 등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하였는데 이에 따라 전자부품 수입도 10억불 이상 증가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렇게 해서는 무역흑자가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부품, 원자재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수입선을 미국, 주로로 돌리고 부품 소재의 국산화개발 및 수입대체를 위해 정부의 여러 지원책, 기업의 개발투자, 국산부품 구매운동 등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일본시장공략을 위한 民·官의 공동노력 및 대책수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흑자기조정착을 위하여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물가안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흑자가 늘어나면 자연히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유동성이 넘치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생겨나고 이것은 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초가 된다. 그러면 그간의

물가안정으로 쌓아올린 경쟁력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므로 여러가지 통화금융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해외로부터의 통화증발을 무리없이 환수하되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국내저축의 잠재력이 계속 배양되어 투자재원의 국내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같은 국내저축의 지속적인 뒷받침 없이는 흑자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흑자시대가 과연 이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여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외환집중 관리제도 아래서 국제수지 흑자의 계속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통화관리의 어려움이다. 무역흑자가 10억불이 증가하는 경우 이것은 곧바로 8천5백억원의 국내 통화증발 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국내 총통화량의 약 2.5%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적정 통화량 공급을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서의 통화증발 요인을 없애거나 통화공급을 억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興信공급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경제성장을 해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부문과 대외 자본거래부문을 통해서 즉 정부부문의 적자와 차입을 줄이고 외채조기상환, 해외투자, 연불수출 등에 의한 자본유출을 통하여 통화증발을 환수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국내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산업의 제도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흑자가 계속될 때 외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 자유화압력이 일층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종전과 같이 무역적자와 외채누적만을 이유로 외국으로부터의 이같은 압력을 피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보호의 폐쇄적 논리보다는 필연적으로 맞서야 할 개방과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시장개방에 있어 유연성을 가

지고 독과점품목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도를 높이는 대신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부품, 소재와 자본재 등 부문은 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限時的으로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아직도 유치산업인 정보산업 및 서비스산업도 한시적으로 보호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흑자기조가 완전히 정착되는 경우 금융·외환·자본시장을 개방 또는 자유화하여 대외거래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자유화 및 개방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흑자기조가 계속될 경우 실질소득이 증대하고 낙관적 분위기가 파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치·소비·투기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데 특히 흑자로 인한 여유자금의 편재는 부동산투자, 비생산성 서비스투자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금융산업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흑자로 인한 여유자금의 배분이 기업간 그리고 산업간에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힘들며 따라서 이러한 산업간 불균형은 여유자금의 편재문제가 생긴다. 이런 현상은 물가면에도 나타날 것인데 공산품, 교역상품부문의 물가는 흑자하에서 안정될 것이나 비교역상품이나 서비스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 이것이 전체적인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흑자의 혜택에서 외면되는 이 부문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해외 부문통화증발을 상쇄키 위한 통화공급축소로 인해 이 부문의 기업가들은 더 많은 자본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는 까닭이다. 흑자로 벌어들인 돈이 건전한 금융「채널」(예컨대 증권시장)을 통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시 산업에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흑자가 장기화되고 따라서 나라가 쓸 수 있는 재원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자연히 복지증진과 적정배분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어느 개인이 돈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장래도 생각않고 당장 다 써버리는 것이 일이 아니듯이 국민 경제의 현실과 부담능력을 도

외시하고 또 장래의 계획도 무시한채 급격한 복지증진만을 요구하는 것도 일은 아닐 것이다. 흑자가 계속된다고 몇년 사이에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치,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의 의식구조가 선진화되지 않고는 진정으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한국을 제 2의 일본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수준은 일본의 1/7도 안된다. 선진국에서 하는 대로 모든 복지제도를 하루 아침에 다 갖출 수는 도저히 없다.

우리 능력에 맞는 그리고 성장의 수레바퀴를 부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국민은 우리나라보다 몇배 잘 살면서도 우리보다 저축을 많이하고 철저하게 국산품 애용을 한다. 그들은 근검하기로 유명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본에게 돈좀 쓰고 사는 것 같게 살아 보라고, 그래서 內需를 좀 일으키라고 충고를 하기까지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도 그들에게 근검, 절약, 국산품애용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근검, 절약, 국산품애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 내부의 여기 저기에 산재하고 있는 적자부문을 흑자기조로 유도하는 일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농어촌민들의 적자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대외거래의 흑자의 혜택이 그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도록 투자, 공업입지 등의 면에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은행문턱이 높아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흑자의 혜택이 돌아가 자금을 용이하게 빌려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잠재실업, 반실업의 유희노동력을 경제의 주류에 참여시키고 직업·기능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기능수준을 높여 근로자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종업원 복지·후생제도의 개선·확대를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무역흑자의 혜택이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흑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흑자시대를 기대해 본다. ♣